

녹색연합 등록번호 001-06-06-001

남북민간환경협력토론회

남북민간환경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2006 05 26 | 만해NGO교육회관

주최 녹색연합

후원 환경부 · 통일부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일정 안내

14:10~14:20	인사말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좌 장	장재연 아주대학교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14:20~14:40	주제발표 1	남북환경협력의 경과와 의의 정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14:40~15:00	주제발표 2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15:00~15:10	휴 식	
15:10~15:50	지정 토론	정소운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지원협력2팀장 김학주 환경부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장 손가용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현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처장
15:50~16:50	전체토론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2006 05 26 | 만해NGO교육회관 대회의실

주최 : 녹색연합

후원 : 환경부 · 통일부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준비위원회

목 차

일정 안내		3
주제 발표 1 남북 환경협력의 경과와 의의 정희성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5
주제 발표 2 남북 민간환경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15
토론문 1 남북 민간환경협력의 추진과 과제 손기웅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4
토론문 2 정현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처장		26

녹색연합
정책토론회
2006-5-21

남북간의 환경협력과 향후과제

2006년 5월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목 차

I. 서언

II. 남북간 환경협력의 필요성

III.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상황

IV. 남북 환경협력에 대한 평가

V. 향후과제와 방향



I. 서언

구분	시작 그러나 진전 무	초보적인 진행
기간	1992 ~ 1997	1998 ~ 현재
기본적 동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제16조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남북 공동 성명(2000. 6. 15)', 친환경협력 분야 포함
태도 (정부)	➤ 남한: 공동연구 제안 DMZ 생태계 조사 등 북한: 무응답/ 거절, 부정적 반응	➤ 남한: 두 가지 대안 실행 - 북한과의 교류채널 다양화(1998) - 대북지원사업의 범위에 환경관련분야 포함(1999)(산림복구, 환경보전지원 등) ☞ 환경협력 주도 ➤ 북한: 응답 및 실행에 참여

◆ 기간 : 약 15년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7년

◆ 주요 방해요소 : 정치적 이유, 이해의 불일치, 폐쇄적인 교류 및 협력 시스템



II. 남북간 친환경협력의 필요성

- 북한의 환경파괴
 - 시급한 환경문제: 산업단지 오염과 생태계 파괴[산림 황폐화]
 - 복원사업이 주요한 국가의 임무가 되었음
-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압력
 - 금강산개발,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간 경제협력의 발전
 - 친화경적 협력을 통한 환경압력 경감
- 남북간 환경자원분쟁발생 소지
 - 수자원분쟁[임진강의 4.15댐, 북한강의 임남댐[금강산댐]]
 - 서해수질악화와 수자원고갈[꽃게잡이 등]
- 지역 및 지구적 환경문제 발생
 - 한반도의 황사피해 경감
 - 지구적 수준의 기후변화에 대응
 - 남북공동의 대응 필요

◆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수요가 남북의 환경 협력을 이끌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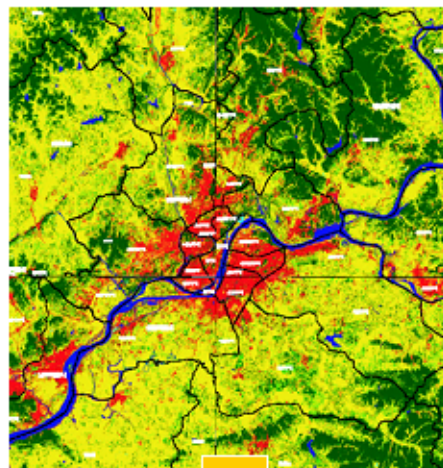


북한의 황폐화된 숲



1980년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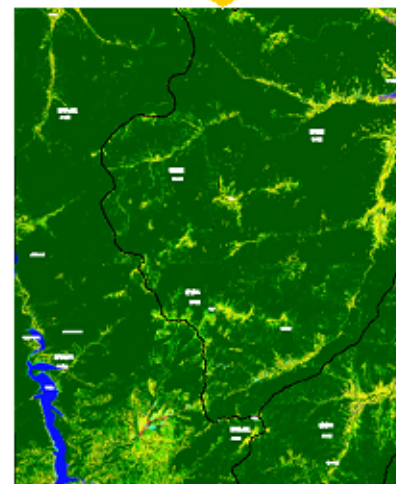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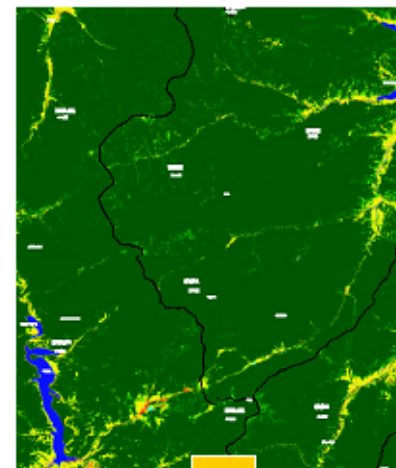
평양권



1990년대 말



개마고원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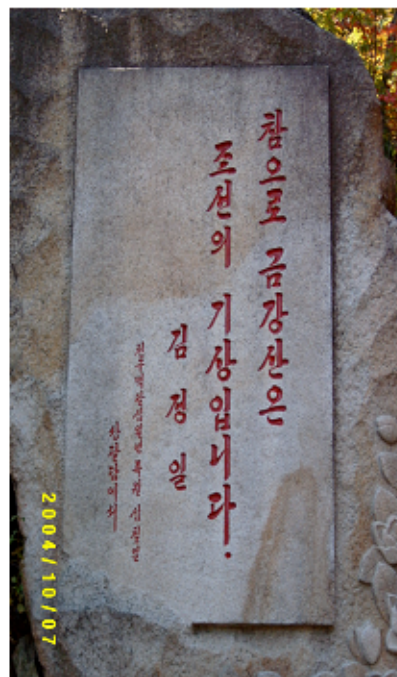
개성공업단지 개발



- ◆ 개성산업단지 개발
환경적 변화 및 압력 발생

금강산 관광단지 개발

- 종합개발
 - 개발범위가 약 100 km² 로
- 장기개발
 - 3단계 개발계획(1998)
- 관광객 수의 증가
 - 2005년 6월 100만 명
- 개발 프로젝트 범위의 확대
 - 골프장 및 공항 등의 건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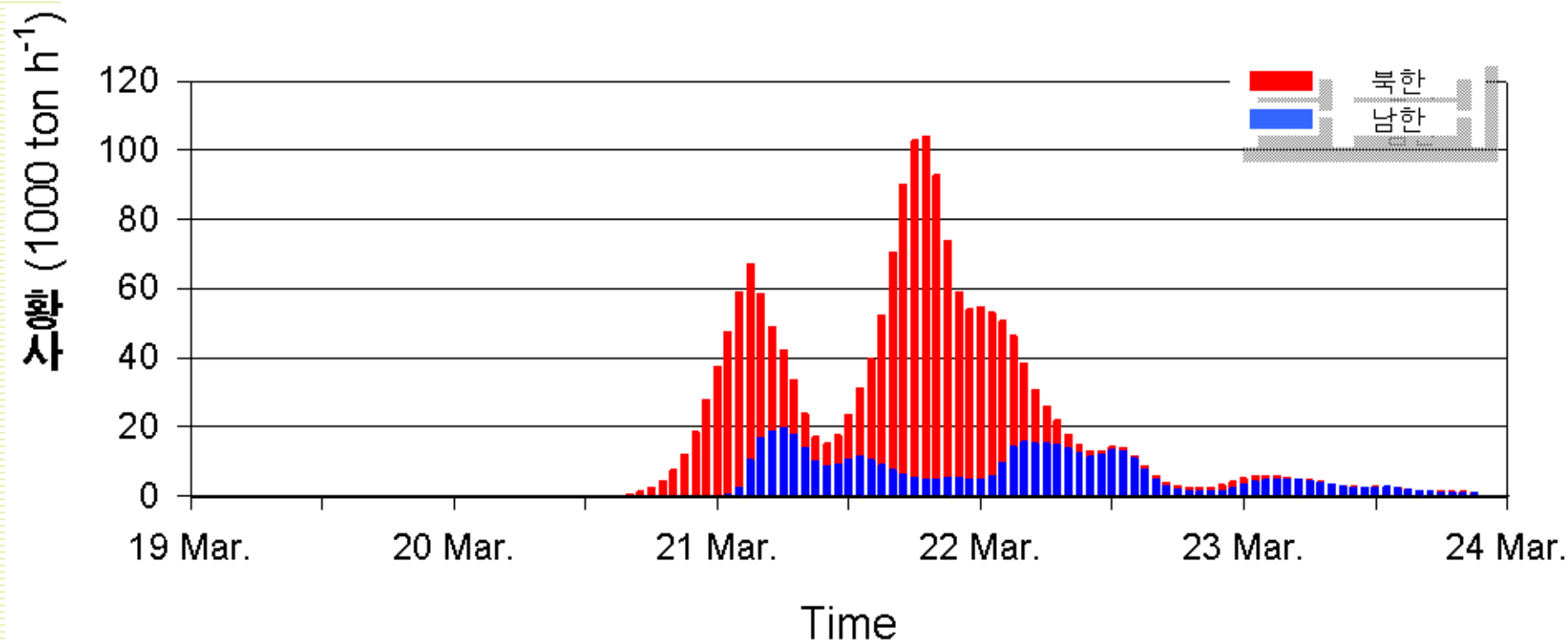


◆ 관광객 수의 증가 및 개발의 확대

☞ 환경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



한반도의 황사, 2002년 3월 22일~24일



- ◆ 남북한은 황사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음
- ◆ 북한의 황사는 남한의 10배 이상임



III. 남북환경협력의 추진상황

주체, 분야, 방법

- **활동주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종교단체), 국제기구
 - 시민단체가 정부보다 더욱 활동적임
- **협력분야**
 - 산림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방법**
 - 국제원조 등 장비와 물품제공
 - 역량 강화

남북 교류협력 사례

구분	일자	주관기관	교류형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동아시아 학자회의	1995. 10	UNDP외 8개국[남북한포함]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
국립공원 및 자연보전지역 동아시아지역회의	1995.5., 1995.9	IUCN과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간접교류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	1995.4	UNDP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간접교류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	1992.2., 2002.12.	수목보호연구회-금강산 관광 총회사, 강원도-민족 화해협의회	남북한간의 직접교류
평화의 숲, 양묘장 조성사업	2000.8.	평화의 숲- 민족화해협의회	남북한간의 직접 교류
북한 양묘장 조성사업[추진중]	2001.7.	UN Office for Project Service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간접교류

정부수준의 주요 활동

- 협력조건 제정
 - 남북한 협약 및 성명
- 환경자료 공유
 - 실행되지 않았음
- 공동연구 프로그램
 - ‘임진강 수해방지 조사합의’
 - 내용: 수자원 및 생태계(임진강 상류의 4.15댐으로 임진강 수량 변화)
 - 목적: 임진강 유역의 홍수예방
 - 실행: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

■ 지방정부

- 주체: 남북강원도
- 기간: 2000-2002
- 분야: 솔잎혹파리 예방프로그램[금강산일대의 약 3000ha 방제지원, 교육, 기자제 제공]
- ❖ 한국 수목보호연구회[1999];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

■ 시민단체의 활동

- 주요단체: 평화의 숲[1999], 동북아시아 산림 포럼[2001]
- 분야: 산림복원 및 산림예방
- 내용: 양묘장 근성사업, 묘목제공
- 기간: 1999 - 현재, 실행: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



지역협력 프로그램

- 프로그램
 - Tumen_Net[1995.4](UNDP), TEMM의 황사회의[2003], UNESCO의 EABRN, 환경영향평가교육
- 기간: 1990년대 후반부터 간헐적으로
- 활동: 간접적 접촉 및 대화
- 방해요소: 북한의 불참 및 부정적 태도
 - 집행능력부족, 북한수요의 불일치, 일부 국가와의 논쟁



IV. 남북 환경협력에 대한 평가

실행 및 지속성 평가

	남한	북한	시작	지속
정부	남측에 의한 DMZ 공동연구 프로그램		1992	실행되지 않음
	경제교류 및 협력위원회에 의한 환경자료 공유		-	실행되지 않음
	임진강 홍수에 방위원회		2002	○[지체]
지방정부/ 시민단체	강원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측 강원도]	1999	x
	평화의 숲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산림과학연구소	1999	○
	동북아시아 산림포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01	○
	환경운동연합	국토 환경보호부	2002	실행되지 않음

◆ 정부수준 : 낮고 느림

◆ 시민단체 : 높음 그러나 분야별 및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환경협력의 특징

- 협소한 분야
 - 산림 복원 및 그 관련 분야에만 중점 두고 있음
- 필요의 불일치
 - 남한(공급자)와 북한(수요자)의 불일치
- 중요한 요소
 -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 국민적 합의, 정치적 우선순위 저조
- 방해요인
 - 양측의 폐쇄적인 교류 및 협력 체제
 - 북한의 독자체제에 의한 의사결정 및 실행
 - 관련부처의 낮은 역량 및 결정권

◆ 양측모두 다른 분야(경제, 문화 등)보다 낮은 우선순위

☞ 환경부처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협력채널을 찾고 있는 실정



V. 향후과제와 추진방향

■ 협력의 목표와 방향

■ 목적

-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친화적 경제개발 지원

■ 방향

- 북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문제에 우선순위;
- 북한의 수요에 기초한 협력사업 발굴
- 협력의 학습효과를 통한 역량강화에 초점
- 환경친화적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감시



주요 분야

- **북한수요에 기초한 분야 선정**
 - 북한의 수요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우선개발
- **친환경적 경제협력**
 - 남북한 협력의 투자개발에 대한 환경지침 마련(대외투자 EIA 실시)
 -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환경협력지침
- **협력채널 구축**
 - 환경부처와 가급적 빨리 직접적 대화 필요,
 - “ 환경보호실무위원회”
- **협력주체 및 분야의 다양화, 관련 정부로부터 긍정적 지원 필요**
- **국제협력기구와 접촉**
 - 지역협력프로그램 혹은 UNEP와 같은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 UNEP 와 북한의 16개 우선 과제 제안
- **협력의 지속가능성 유지**
 - 현재 및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 프로그램 개발
 - 협력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고려



주요 과제

	사업명	주요내용
산림 [3]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기간 및 예산: 2년, US\$ 385,000 ■상태평가, 산림관리복원 전략수립
	멜감지역 관리 시범사업	■기간 및 예산: 2년, US\$ 1,250,000 ■멜감지역조사, 산림관리교육
	산림관리정보센터 설립	■기간 및 예산: 2년, US\$ 288,000 ■전문가교육, 관련장비구입
수질 [4]	대동강 통합수질오염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기간 및 예산: 2년, US\$ 760,980 ■관련장비 및 설비도입
	물 보전 워크숍	■기간 및 예산: 2주, US\$ 4,000
	도시폐수 및 순환 처리시스템 시범사업	■기간 및 예산: 3년, US\$ 2,500,000 ■하수처리현대화, 고도처리 도입
	압록강 오염방지사업	■기간 및 예산: 2년 US\$ 915,000 ■APMP[Alkaline peroxide mechanical pulp] 도입

	사업명	주요내용
대기 [3]	통합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기간 및 예산: 2년, US\$ 720,000 ■평양 시내 20개 모니터링 지점설치
	평양 지열발전내 집진설비 도입사업	■기간 및 예산: 2년, US\$ 2,270,000 ■전기집진기 설치, 훈련
	주요도시 대기보전 워크숍	■기간 및 예산: 2주, US\$ 5,000
토지 [2]	토양오염 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능력배양사업	■기간 및 예산: 2년, US\$ 520,000 ■토양분석 전문가 훈련
	토양보전워크숍	■기간 및 예산: 3주, US\$ 6,000
생물다양성 [4]	생물다양성 자원 목록작성 및 평가사업	■기간 및 예산: 4년, US\$ 300,000 ■생물자원목록 갱신, 경제성 평가
	생물다양성 조사 및 관리사업	■기간 및 예산: 2년, US\$ 570,000 ■모니터링체계 구축, 법제도 분석
	산림복원사업	■기간 및 예산: 3년, US\$ 765,000 ■조림/식림 및 묘목 확대
	해양보전지업 관리증진사업	■기간 및 예산: 2년, US\$ 364,000 ■기간시설 설치, 생물다양성 조사

남북민간환경협력 추진방향과 과제

김제남 / 녹색연합 사무처장

<글을 시작하며>

올해 남북 정상외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이 되었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 평화, 민족대 단합의 원칙아래 통일의 미래를 밝혀주고 통일을 실천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남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간 왕래와 교류협력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는 민간 차원의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를 결성하고 1년여 이상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를 풀고 보다 넓은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하였다. 남북이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를 진행하면서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이 나오는 국내외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부문의 교류협력사업은 6.15 공동선언 합의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힌 것처럼 남북여성대회가 열리고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 교육자, 남북작가, 종교인들이 만나고 학술,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협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00년 현대아산과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합의하고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 제정으로 개성공단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8천여 명에 이르는 북녘기행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야말로 남북이 화해, 협력하여 공존, 공영하는 통일의 길로 성큼 나아가는 명실상부한 6.15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6.15 공동선언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념의 기치아래 모여 깃발을 흔들자는 것이 아닌 남측의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이 갖는 공공성과 가치를 북과 협력하여 남북 모두에게 이로운 것으로 그 실천을 확장하는 것이다. 평화, 생태(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환경분야 남북협력이 중요한 이유이다.

아쉽게도 지난 시기 환경을 의제로 한 남북환경협력은 민간이나 당국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 환경 인사들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거나 남북이 절실하다고 공감하는 공동의 과제를 마련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다.

우리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서로 사는 체제, 이념, 생활습관 등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민족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한반도라는 하나의 국토 안에서 오랜 세월 공동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만들어 왔다.

한반도는 백두대간 1400km를 남북으로 이어 한반도 척추로서 중심축을 이루고 비무장지대는 248km 동서를 잇는 허리로서 녹색띠를 형성하고 있다. 강을 품어 기르는 백두대간으로부터 발원한 강줄기는 동해와 서해로 합수되고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반도 국토 공간의 생태계 안에 살아오면서도 분단은 생태계 분절을 낳았고 생태계 변화상, 동식

물 변화상 등을 온전하게 자료화하고 공동의 자연자원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또한 남북 공히 환경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하지 못했다.

더욱이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개성공단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막상 환경성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6.15 시대정신에 맞게 남북 환경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조급하지 않지만 성실하게 준비하여 남북환경협력의 시대 요청에 부응하는 남북의 일꾼들과 비전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최근 남북환경협력 추진 현황>

- 2005. 1. 31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위원회 발족하면서 시민단체가 주요 역할로 참여함
- 2005. 2 남측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모임을 정례화하고 시민단체의 주요 활동의제로서 환경과 평화를 상정함
- 2005. 3.3-5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공동위원회 결성식
- 2005.4.10 심양에서 북측위원회(민화협)와 남측위원회 시민환경부문 간담회를 열어 남측의 시민환경단체를 소개하고 향후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함. 북측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환경부문위원회를 소개받음
- 2005.4.27-28 금강산에서 환경부문모임 진행. 남측은 민변 이석태 회장과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이 참석하고 북측은 환경분과위원회 백승익 대외사업부장 참석하여 남북 환경실정과 북의 환경정책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공유함
- 2005. 6.15 5주년 기념행사가 평양에서 열리고 남북 시민부문상봉모임 행사에 남측 환경단체(환경연합, 환경정의, 녹색연합)참석하고 북측은 환경분과위원회 안병소위원장이 참석함
- 2005. 8.15 60주년 기념행사가 서울 위커킬에서 열리고 30여명이 남북해외 환경부문상봉모임 진행, 남측 환경운동 소개와 환경협력의 중요성과 6.15 공동선언 실천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함
- 2005. 12-9-11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로의 명칭개정과 규약 채택
- 2006. 2.15 남측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
- 2006.4.4 남측 남북환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모임 진행
- 2006.5.19 개성에서 남북환경협력을 위한 실무접촉 진행(남측 녹색교통,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연합 참석. 북측 환경분과위원회, 민화협 참석)
- 2006.5.26 남북환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6. 6월 남북환경협력 실무접촉 예정

<현재 진행중인 북한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 공식성을 갖는 남북환경협력사업은 민간이나 당국간 공히 없는 실정임
- 그동안 평화의 숲, 동북아산림포럼이 북의 산림복원을 위해 나무, 종자, 양묘장 등 지원사업 진행

○ 북은 주로 UNDP, UNEP, 유네스코 등 국제환경기구를 통해 환경실태조사 및 환경개선사업 등 환경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03년 UNEP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이 협력하여 환경상태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라 16개 환경개선 우선사업을 추진중임. UNEP는 124억원의 국제신탁기금을 조성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이며 한국 정부는 환경부와 통일부가 40억원을 출연, 참여하기로 함

(16개 환경개선 우선사업)

- 산림분야 3개사업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댐감지역 관리 시범사업, 산림관리정보센터 시범사업)
 - 수질분야 4개사업 (대동강 통합수질오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물 보전 워크숍, 도시폐수 및 순환처리시스템 시범사업, 압록강오염방지사업)
 - 대기분야 3개사업 (통합대기환경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평양 열발전소집진설비 도입사업, 주요도시대기보전 워크숍)
 - 토지분야 2개사업 (토양오염조사와 모니터링을 위한 능력배양사업, 토양보전 워크숍)
 - 생물다양성분야 3개사업 (생물다양성 자원 목록작성 및 평가사업, 생물다양성 조사 및 관리사업, 산림복원사업, 해양보전지역 관리증진사업)
- 유네스코 협력사업으로 이른바 2004년 북은 자료집이 발간되고 북한 자연보호구역 편람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실행기관은 유네스코 북한 MAB 국가위원회)

<남북환경협력추진의 기본원칙과 방향>

- 남북환경협력사업은 '우리(남북) 공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남북 공동의 필요와 이익을 중심으로 협의하여 진행
-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이 되면서 실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사구시 구현
- 남북경제협력과 환경협력이 상호 조화와 통합성을 갖도록 환경 지침의 마련
- 민간차원 환경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면서 당국간 책임 있는 환경협력의 여건을 함께 조성함
- 북측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원성사업과 남북공동의 이익과 환경성을 높이는 교류협력사업의 적절한 조화
- 환경현안의 해결이라는 단기 과제와 더불어 남북 생태복원 및 남북 환경공동체 회복이라는 장기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

<남북환경협력사업 앞에 있는 도전과 과제>

1. 남북경제협력이 개발주의로 경도될 우려

1) 개성공단과 환경성

(문제제기)

① 환경부가 올해 초에 마련한 남북경협 환경가이드라인이 통일부의 소극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와 같이 현재 남북협력은 경제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인식이 낮은 상태임. 북의 개성공업지구법 제4조에서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역 활동할 수 없다'고 하나 그 적용의 세부 시행령은 없음

② 개성공단 100만평 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총 2천만평의 공단과 배후도시를 북측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남측의 이윤추구 목표가 앞서고 개발 속도전을 내세우면 환경파괴 심각해짐, 100만평 규모의 개발사업이라면 사전환경성검토와 같은 환경영향조사와 환경타당성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개성공단 환경계획은 개별입주기업의 배출허용기준 규제 정도임

③ 개성공단은 비무장지대 판문별 상류에 위치하여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에 넓게 발달되어 있는 습지와 초지생태계를 단절시키고 훼손하여 사막화되어 있음. 특히 개성시 남부경계에서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고 개성시내를 임진강 지류인 사천강이 흐르고 있어 물 생태계 훼손 우려. 남북경제협력과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이 반환경사업의 표상이 되지 않도록 환경성을 검토해야 함

(과제)

① 개성공단이 개발되는 지역은 비무장지대 우수한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는 완충지역이며 물환경이 풍부함으로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남측의 환경영향평가(내용상)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며 1900만평 개성공단 예정지역은 남측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적용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친화형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특히 개성공단 입지지역은 자연생태계 가치가 높은 비무장지대를 연결하고 파주와 문산 등 접경지역 개발욕구가 높은 접경지역과 닿아 있고 임진강, 한강하구와 연결하는 물줄기와 연결되어 있어 종합 환경계획이 요구됨.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수도권성장관리 기본구상은 개성공단 개발과 연계하여 동북아 성장거점화한다는 계획이어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주변 수도권,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포함한 사업 타당성과 환경성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남측의 난개발을 북으로 확장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③ 개성공단의 생태전략화를 모색하여 입주한 업체들간의 자원절약형 그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생태산업단지화 및 유기농장과 가공공장 연계방안, 노동과 기술집약형 환경산업단지화 방안, 주변 생태계와 개성시 생태축과 연결되는 생태공원 조성방안 등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이 환경협력과 통합되는 발전방안을 내는 해안이 요구됨

④ 사업주체인 현대아산, 관리주체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통일부, 산업지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성공단 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와 토론에 이블을 만들 것을 제안함

⑤ 개성공단의 환경친화성을 남북경협의 환경가이드라인의 좋은 본보기로 만들고 환경부가 만든

환경가이드라인이 출대받는 것이 아닌 남북경협 의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램

2) 한강하구 남북공동개발과 환경문제

(문제제기)

① 지난 4월 제 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단장인 통일부장관은 북측단장인 내각책임참사에게 함경남도 단천시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 지정, 한강하구 모래 공동개발을 제안함. 공동개발을 제안한 한강하구 모래는 10억 루배 이상으로 수도권이 연간 필요로 하는 5천만 루배의 20배 이상일 것으로 경기부양책에 따른 건설자재관을 장기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

그러나 강화도 용진군 모래채취 중단 사례의 경우처럼 모래사구 파괴로 해양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어류 서식지 훼손 등 해양생태계 파괴가 모래채취 중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

② 한강하구는 지난 417 환경부에 의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김포시 고촌면에서 강화군 송해면에 이르는 30km, 1,835만평 습지보호구역에서는 모래채취, 어로행위 등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남북을 접경하고 있는 한강하구에서 모래채취를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습지보호구역 지정의 의미와 목표를 상실하게 됨. 설령 습지보호구역 범위 밖이나 북측 유역에서 개발(남측 한강유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북측 한강유역은 개발로 파괴하는 것은 경제협력 이전에 공공성,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이 이루어진 다 하더라도 남북이 접경하고 있는 유일한 자연형 한강하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함. 사람의 개발계획은 강을 인위로 쪼개어 개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강은 하나의 물줄기로 흘러 풍부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음

(과제)

① 한강하구 접경지역은 군사상 출입통제가 없는 지역으로서 유일하게 남북이 접하고 있는 자연형 하구이며 철새서식지, 어류 서식지 등 생물가치가 높아 남북이 협력하여 보호해야 할 지역임. 한강하구 모래 공동개발에 대한 제안은 한강하구 생태계 현황과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 없이 나온 것으로 제안을 철회하고 원칙 있는 남북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함

② 한강하구와 같이 남북이 접경하고 있는 지역의 생태계 조사와 공동 관리방안을 무엇보다 먼저 찾는 것이 남북협력의 기본과제가 되어야 함

2. 비무장지대 보전과 개발

○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4km, 동서로 155마일 248km가 비무장지대임. 비무장지대 밖 5-20km 이내가 민통선지역, 일부 민통선과 민통선 이남 20km이내 접경지역임.

○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에서 보기 드문 자연초지를 형성하여 초본식물의 생산성이 높고 초식동물을 부양하는 희귀한 생태계로 그동안 '생태' '평화'가치를 실현할 보호 및 이용방안이 제기되어 왔고 정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정부방침으로 확정하여 북에 제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위해서는 남북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함

○ 북은 군사분계선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무장지대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관리하

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공동 생태계조사 제안에도 난색을 표명함. 북이 정치군사상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을 환경협력 의제로 서두르기보다 공동의 합의가 수월한 협력의제로 환경협력을 추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남북공동 추진 등 정부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는 인근 민통선지역, 접경지역(접경지역지원법)의 과도한 개발계획(접경지역 300만평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 500만평 신도시 건설 등)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이미 경의선, 동해선 도로와 철도 연결사업으로 비무장지대 생태축이 단절되었고 개성공단은 비무장지대와 연결되는 완충지역을 사막으로 만들고 있음.

○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추진 등 분단의 상징을 '생명평화'의 상징으로 남북공동의 보호관리라는 장기과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도한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비무장지대와 생태축으로 연결되는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3. 전략물자 반입금지 체제

○ 전략물자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바세나르협정에 가입하고 있어 대북 물자 반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함, 또한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인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규정에 걸리는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물자가 북으로 들어가지 못함

○ 남북교류협력의 다양한 분야에서 물자가 오고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환경협력의 경우도 환경개선 및 공동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위해 환경관련 설비와 장비가 오고가야 사실상 남북 환경협력이 실천성을 가짐. 예를 들어 중국 황사방지를 위한 남북환경협력사업으로 남북 공동으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와 같은 물자가 오고가야 함

○ 민간차원에서 남북환경협력을 비롯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도지원 및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한 물자가 원활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전략물자통제체제의 변화를 위해 한미당국의 노력이 요구됨

<남북민간환경협력 과제 제안>

- 남북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활동과 공동보고서 편찬사업
- 남북환경현황 공동조사사업 및 남북환경보고서 공동발간
- 남북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숲 조성 및 생태공원 조성 포함)
- 남북 야생동식물보전사업(남북을 왕래하는 이동성 야생동물 서식실태 파악과 보호)
- 남북을 잇는 강 유역, 습지, 연안역 보호사업/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생태계보호사업
- 환경정보 및 환경기술, 환경설비를 통한 환경개선 협력사업
- 황사방지 공동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사업, 지구온난화방지 등 지구환경보전사업
- 생태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으로서 생태관광 추진방안 모색
- 환경교육 및 환경인식 증진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 물, 대기질 등 환경질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 남북환경보호를 위한 법, 제도 협력사업
- 남북에너지협력사업
- 남북 자연환경보호지역 현장 탐사 추진

(남북환경실무접촉에서 제안한 몇가지 사업)

- 백두대간 보전과 백두대간 남북 공동보고서 편찬사업
 - 백두대간을 바탕으로 남북이 국토를 이해하고 한반도 생태계 가치와 특징을 조사, 정립하여 공동보고서로 편찬하는 일은 6.15 시대, 통일의 시대를 사는 7천만 우리 민족에게 올바른 국토관, 자연관을 인식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북은 96년 백두대산줄기체계를 세워 관리방안에 들어가 있고 남은 2004년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어 법 기반을 만들고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동안 남북이 각각 조사연구하고 정립해 온 산줄기체계와 자연, 역사, 문화 기록을 하나의 보고서로 묶어 공동 편찬하여 대내외에 그 가치를 알리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 됨
 - 남북 국토는 백두대간이 하나로 잇고 있고, 6.15 공동선언은 분단된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로 교류·협력하는 큰 역할을 함
- 북 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대동강 수질개선사업
 - 북은 최근 환경오염원의 증가, 오염정화시설의 노후화로 주요 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평양도심을 흐르며 평양시민의 식수원이 되는 대동강은 서해갑문 건설이후 물의 정체가 커지는 반면 정화되지 않은 오염원 유입이 증가하면서 부영양화가 심각하게 증가함
 - 대북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상징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대동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장비 및 설비 지원은 의미있는 사업이 됨
- 동북아 황사방지를 위한 남북공동 모니터링과 예·경보 시스템 구축
 - 남북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피해지역으로 공동대응 필요성
 - 황사발생 현황과 피해 모니터링,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은 민관이 공동으로 남북환경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의제임

<남북환경협력사업 추진방안>

1. 추진주체

-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안병소 위원장)가 북측 환경협력 당자사가 되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환경단체와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른바 민간 차원의 '남북환경협력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남측의 환경협력 주체를 폭넓게 구성할 것을 제안함

2. 남북환경회의 정례화

- 남의 남북환경협력추진위원회와 북의 환경분과위원회가 공식성, 대표성, 정기성을 가지고 주요

환경협력 의제발굴과 실천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남북환경협력의 정책과 전망을 논의하는 토론회, 자연환경보전지역 탐사, 화해와 친선을 위한 상호왕래 등을 지속하는 남북환경회의 정례화, 남측 환경협력추진위원회는 별도의 토론회 및 남북환경포럼을 운영하여 내용을 풍부하게 생산하는 노력이 요구됨

3. 남북환경협력사업기금 마련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 남북환경협력사업을 실사구시로 실행력을 가지려면 추진 기금을 마련해야 하며 대국민참여모금 운동, 기업의 남북환경협력 사회공헌 기금 모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청을 통해 사업비 마련

○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은 사회문화교류사업과 지원협력사업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환경협력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으로 지원협력팀에서 지원업무를 보고 있음. 대북 인도지원사업은 지원단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민간차원의 환경협력사업을 대북 인도지원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임. 남북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대북지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 녹색 가치를 한반도 환경공동체 회복으로 확대하여 실천하고자 함.

민간 차원의 남북환경협력사업은 앞서 기본원칙과 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환경정보와 기술, 환경 장비와 설비 등을 지원하는 지원성사업과 남북공동의 협력으로 공동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등 공동의 결과를 생산해 내는 교류협력사업 모두 중요함. 남북환경협력사업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함

<글을 마치며>

와덴해 연안국은 상호 협의와 협력으로 독일 전 연안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보전하고 있다. 하물며 백두대간으로 이어진 한반도라는 하나의 국토 안에 살아 온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국토를 보호하고 미래세대에게 녹색으로 거듭난 통일조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 하겠다.

지난해부터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부족하나마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높이고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환경협력은 남북 공동의 관심사로서 하나뿐인 국토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이익이 나는 방향에서 교류협력의제와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몇차례 평양과 개성을 오고가며 우리 민족이 살아 온 국토에 발을 내딛는 설렘이 있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넘어 개성으로 들어설 때는 수십 년 세월 생태계 변화를 거쳐 희귀하고 습지 생태계로 안정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계절의 변화와 함께 마음에 담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이 본격화될수록 낮은 구릉지대와 돌산이 사라지고 사막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갖는다. 경제협력이라는 목표만큼이나 환경성을 고려하여 경제협력과 환경협력이 충분하게 시너지가 나는 더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 개성시에 남측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나무심기행사를 여러차례 가졌다. 나무심기

행사도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성시에 잘 보전되어 있는 녹지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작막한 개성공단에 녹색을 심는 비전으로 심어야 하듯이 남북환경협력사업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꾸준하게 발전되어 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토론문-남북민간환경협력의 추진과 과제

손기웅 / 통일연구원 남북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환경문제는 오늘날 지구적인 문제이며, 어느 국가도 환경의 오염과 파괴에 의해 비롯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존속이 그것의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국가, 모든 국민이 모든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각국의 정치, 사회, 학계에서 성숙되어가고 있으며, 국가 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모아져가고 있다.

남북한도 이로부터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민족 공통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존하고 유지함은 물론, 질적으로 개선하기 하기 위해서 환경분야 남북협력은 민족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요청에 그 동안 선도적으로 부응하면서 노력해온 발표자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훌륭한 발표문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힘을 쏟아야 할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의 도정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려는 마음의 일환으로 과거 통일 이전 동서독 간에 추진되었던 환경협력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지정학적으로 중부유럽에 위치하고,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며, 산업화가 진전된 양 독일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시급히 국가적으로 대응되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동독 내에서 발생한 환경의 파괴는 자국에게도 물론 서독에게도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서독은 지형상 동독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심하게 영향을 받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양독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의 상류가 주로 동독에 위치하고 있어 동독에서 발생한 하천오염이 서독에게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국경간의 대기오염문제 역시 동독의 오염도가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상학적 요인으로 인해 바람의 대부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 서독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내독 간에 서로 문제가 된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서독은 방지대책들이 주로 동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동독은 피해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제공자에 부담시킨다는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였지만, 비용 상의 이유를 들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양독 간에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피해의 제거가 서독에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환경보호조치에 미온적이었다.

양독간 환경보호조치와 관련한 동독의 이와 같은 태도에는 서독으로 하여금 동독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하거나, 서독이 환경기술사업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하도록 유도해 낸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동독은 이를 통해 피해제거비용을 절감하거나, 환경보호부문에서의 기술개발비용 절감 및 기술획득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차이로 인해 동서독은 외면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에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실질적인 협력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던 동서독간의 환경협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양독간 직접적인 환경분야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동서독간의 정치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기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긴장관계의 조성으로 실질적인 환경분야 교류협력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1987년 환경보호기본협정의 체결에도 동서독간의 정치적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과정에서 동독은 형식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에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실질적인 협력에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동독은 기본적으로 서독으로부터 기술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정책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제한된 분야에서만 이루어진 양독간 환경협력은 서독이 동독에 해당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바탕위에 추진되었다.

셋째, 성사된 동서독간 환경협력의 경우 협력내용과 방법, 작업지역, 작업인력의 활동 범위는 물론 이들에 대한 구호조치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초기부터 동서독의 대표들은 협력관련 사항을 가능한 한 문서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접경하천 관련 협력이 그러하였으며, 이 경우 상설된 접경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 즉 이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넷째, 양 독일은 합의를 통해 모두가 이득을 보거나 혹은 양 독일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베라강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됨으로써 합의를 이룰 수 없었던 반면, 뢰텐강의 경우에는 조속한 결과를 쥘어낼 수 있었다.

다섯째, 당국자간의 교류협력외에 동서독의 환경관련 NGOs간의 교류(예를 들어 동독의 “자연 및 환경보호단체”와 서독의 “환경 및 자연보호연맹”간에 교류, 그리고 동서독 신교도 신자들 중심의 평화·환경운동 등)가 큰 의미를 가졌다.

여섯째, 동서독은 UN기구를 포함한 다자적 차원에서 간접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비록 그 성과가 동독 환경개선의 형태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1980년대 중반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던 다자적, 간접적 환경 교류협력이 1987년 동서독간 환경보호기본협정 체결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다.

토론문

정현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처장)

북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이 크다는 것은 다들 짐작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철도 시험운행의 무산을 지켜보면서도 그런 느낌들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민간교류에서도 일차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6.15 6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선 경비행기가 DMZ를 통과하여 비행하는 문제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북은 13일에 하자는 것이고 남은 11일에 하자는 것인데, 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홍보효과를 보자면 13일 한-토고 전을 피해야 하는 것이고, 북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일찍 들여보내서 자기 식구들이 뭐하나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비행이 성사되자면 군사당국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 데, 이 협의의 제안을 놓고 또 신경전이 있습니다. 북은 남측더러 남에서 제안하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 제안에 마음을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 DMZ 통과는 북이 이미 뒷선에서 정리한 문제인데, 실무적인 것들에서 서로 협의가 잘 안되어 무산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1년 남북공동행사가 시작되기 오래전인 1990년에 남북 당국이 서울에서의 공동행사를 승인하면서 최초의 공동행사가 성사될 뻔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정부는 인터콘티넨탈호텔을 고집하고, 민간은 아카데미하우스를 고집하여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북은 북대로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행사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된 이후로도 서로 마음이 달라 무산된 경우가 여럿 더 있습니다. 2002년 2월의 새해맞이공동행사나 2004년의 8.15평양행사가 대표적 예입니다. 정부가 실정법을 내세워 특정 인사를 불허한 것이 이유였지만 실상은 정치가 작용한 탓입니다. 2002년에는 그 시기가 부시 방한이 있었던 것이고 2004년에는 탈북자의 대량입북이 북을 자극한 것입니다.

남북교류가 무릇 이렇습니다. 서로의 지향이 달라서이거나 정치적 외풍이 작용하면 그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지향과 외풍이 없더라도 매우 사소한 문제를 자존심 때문에 서로 버티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교류를 하다보면 연계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사자 간 신뢰입니다. 우리는 교류의 역사에서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4년 9월에 금강산에서 있었던 남북역사학자협회의 공동행사입니다. 이 시기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던 초입이었고, 그래서 감정도 고조되어 있을 때였는데 모든 행사의 무산 가운데서 이 행사가 성사된 것입니다. 혹자는 이 행사가 북 소재 고구려 고분벽화의 문화유산 지정을 축하하는 것이라, 북의 입장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남측 역사학자협회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북측 당사자들이 '상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성사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분야 자체가 부담이 덜 가는 고대사 부분이거나 일본 문제라는 점과 더불어 남북역사학자들 사이에 맺어진 신뢰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남북환경협력의 경우, 바로 이러한 교훈이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북의 환경문제와 개발문제의 연관성입니다. 대개의 개발 역사는, 뒤

늦은 후회와 더불어 '건물'을 제거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과정을 겪는 만큼 남북사이의 공동개발 사업이 환경을 고려하는 협력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미래의 통일공동체에서도 역시 제기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지난 5.19 환경접촉에서 제안한 사업을 보면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공동조사라는 접근도 그렇고 설비 투입 지점을 대동강으로 잡은 것은 북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보고, 또 이제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측 환경 분야의 준비로도 현실적인 접근이라 봅니다. 환경 분야의 협력 사업은, 현실 가능한 영역을 찾아 작은 결실을 내면서 상호 신뢰와 필요성을 인식시켜 가면서 점차 중대해 가면 될 것이고, 이 과정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정립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측 재건에서 거쳐 가야 할 과정을 놓고 볼 때, 환경 분야의 인식이 성장한 우리 측 인식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의 현실에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 쪽 협력 사업의 범위를 넓혀 보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조금 무지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발상을 개발 사업 영역을 포괄해 가는 환경협력으로도 구상해보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이 가능한 다른 측면의 이유는 남북경협이 무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별로 없지 않나 하는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더 많이 열려 있으며 기업들의 경우도 수익보다는 다른 접근 속에서 대북사업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 부분과 비슷한 문제인데, 체제수호라는 목표와의 상충관계입니다. 이 목표에는 주로는 북의 군부가 깊게 관계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인식차가 있고 그 차이를 좁히고자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한강하구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 사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상호 자기지역 보고서를 교환해 놓은 상태에서 정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임진강의 북측 4.15땀방류의 경우도 제대로 통보가 되지 않아 남측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민족공조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보자면, 이런 일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체제수호와 군부의 이해관계라는 문제로 보지 않으면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북의 군부가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서 혜택을 받는 사업을 제안하고 공동으로 성사시키는 문제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 틈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 한강하구 모래채취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환경과 개발의 관계로만 접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사회공동체의 접촉과 협력이 상호 이질성으로 인한 대결적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단계적 과정, 즉, 지금으로서는 군부의 의구심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접근에서 나온 의견이라 하더라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실현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는 역시 타당한 것이므로, 지금에 있어서는 좀 더 직접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